강원도

■ 횡성군, 가축재해 보험가입 지원

횡성군이 FTA와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축산농가 보호를 위해 가축재해보험가입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지원은 FTA대응 강원도 자체 사업의 일환으로 정부지원 가축재해보험사업과 연계한 지방비 추가 지원을 통해 가입자 부담료를 줄여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군은 가축재해보험 가입시 국고 50% 지원외에 가입자 부담률 50%에 대해 지방비로 2분의 1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가축재해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가축재해보험상품에 가입한 축산농가로 소, 돼지, 닭, 벌 등 가축과 적법한 축사시설에 한하며 농가당 300만원까지 지원된다.

■ 양양군, 가축사육 제한

양양군이 지역별로 가축사육을 제한한다.

양양군은 가축사육으로 인한 주민생활환경 침해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환경부의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한 연구용역에 따른 권고안을 지역실정에 맞도록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키로 하고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가축사육 제한 조례는 가축사육제한지역을 전부제한지역과 일부제한지역으로 규정하고 주거지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 자연공원구역, 학교 및 관광특구 등을 포함하는 전부제한지역에서는 애완견 2마리 외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주거밀집지역에서 소·말의 경우 150m이내, 젖소·사슴·양은 370m이내, 돼지·개·닭·오리는 750m이내로 하는 일부제한지역에서는 허가대상과 신고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가축사육에 따른 의무규정을 명시해 위반할 경우 사육규제 및 철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양양군 관계자는 "조례제정에 따른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청남도

■ 당진, 전국 최대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탄생

충남 당진에 전국 최대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이 건립됐다.

충남도는 지난 10월 30일 당진시 송산면 가곡리에서 구본충 도 행정부지사와 오정규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 도내 축산농가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당진낙협(조합장 이경용)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장 준공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지난 2010년 6월부터 국비와 지방비, 자부담 등 모두 133억원을 투입한 이번 시설은 1만8316㎡의 부지에 1만6000㎥ 규모의 액비 생산시설과 5182㎡ 규모의 퇴비발효사 등을 갖추고 있다.

가축분뇨 처리 규모는 1일 200톤, 연간 6만톤

으로, 전국 최대이다.

이 사업장은 앞으로 돼지 57호와 젖소 148호, 닭 14호 등 모두 219호에서 1일 발생하는 200톤 가량의 가축분뇨를 처리할 계획으로, 이는 당진에서 1일 발생하는 가축분뇨 2,576톤의 7.8% 수준이다.

특히 가축분뇨를 활용해 생산할 양질의 퇴·액비는 인근 경종농가나 조사료 재배단지에 공급하게 되는데, 도는 이를 통해 우수 농산물 생산을 통한 지역 농축산물 경쟁력 강화와 자연순환농업 추진 탄력 등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도는 가축분뇨 해양배출 전면 금지에 대비하고, 자원화를 위해 지난 2006년부터 3년간 764억원을 투입 ▲공동자원화시설 9개소 설치·운영 ▲개별시설 778개소 지원 ▲액비 살포조직 24개소 육성 ▲액비 저장시설 592개소 설치 등을 추진했다.

올해는 170억원을 들여 ▲공동자원화시설 4개소 ▲개별농가시설 125개소 ▲액비 살포조직 5개소 ▲액비 저장시설 133개소 ▲농경지 살포 9200㏊ 등 자원순환형 축산업 육성을 위해 중점 지원 중이다.

충청북도

■ 도내 폭염피해 축산농가 4천400만원 지원

지난 여름 폭염으로 피해를 본 축산농가에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19일 충북도를 비롯해 각 시·군에 따르면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10일까지 계속되는 폭염으로 도내에는 충주·제천·청원·영동·괴산·음성지역에서 닭·오리 10만3000여 마리가 폐사했다.

이 중 피해액이 3억원 미만으로 농업재해로 인정된 농가에 해당 지자체가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충주의 경우 닭 8만1000여 마리 폐사로 재난지원금 1900만원을 지급하고 제천시는 닭 7800여 마리 580여 만원을 지급한다.

청원군은 닭·오리 1만8000여 마리에 대해 1300만원을 지원하고 음성군은 5개 농가에 재난지원금 650만원을 지원한다.

■ 동물복지농장 18곳 확대

동물에게 배고픔, 불편함, 통증, 두려움, 정상적인 행동의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육하는 농장들이 동물복지 축산 농장 인증을 받았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단양 찬호농장(영춘면 만종리)·밤재농장(영춘면 하리) 등 7곳의 산란계 농장을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했다고 4일 밝혔다.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소·돼지·닭·오리농장에 대해 국가에서 인증하는 이 제도는 인증농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에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마크'를 표시하게 된다.

지난 3월 20일 도입돼 현재까지 인증을 받은 농장은 총 34곳으로 이 가운데 18곳(52.9%)이 충북에 몰려있다.

지역별로는 단양이 병두농장, 풀리골느티농장, 영춘양계, 용소농장, 우리농장, 강변농장, 양지농장, 계영축산, 북벽농장, 영춘농장,배틀농장,찬호농장, 밤재농장 등 12곳으로 가장 많았다.

음성(동일농장, 이레농장, 동일농장 삼성지점) 3곳, 제천(우리농장, 강희농장) 2곳, 진천 1곳 (동일농장 이월지점) 순이었다.

충북지역에 동물복지 축산농장이 몰려있는 까닭은 그동안 친환경 축산법을 추구해온 농장들이 요

건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전라남도

■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신청 접수

전라남도는 한·미 FTA를 비롯한 대외 개방 확대에 대응하고 가축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오는 11월 30일까지 2013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희망 농가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내년도 사업량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신청 전 농가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도내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기반을 조성, 가축 사육환경을 개선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사업 신청 대상은 2012년 현재 축산업등록 농가로 소·돼지·닭·오리는 전업규모 이상, 흑염소·사슴·꿀벌은 전업규모의 2배 이상을 사육해야 하며 기업규모 이상은 융자사업 대상자다.

전업규모는 소 50마리 이상, 돼지 1천 마리 이상, 닭 3만 마리 이상, 오리 5천 마리 이상, 흑염소 300마리 이상, 사슴 50마리 이상, 꿀벌 100군 이상이며 기업규모는 전업규모의 2배 이상이다.

친환경축산물인증을 받은 농가는 사육 규모에 상관 없이 우선 지원하며 무허가 축사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 지원 후 허가축사로의 전환 시 가능하다.

전업농 미만 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 전업농 규모로 축사시설을 확대할 경우 전업 규모까지 면적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보조사업은 보조 30%, 융자 50%, 자담 20%(융자 연리 3%·3년거치 7년상환) 조건이며 융자사업은 융자 80%, 자담 20%(융자 연리1%·3년거치 7년상환) 조건이다.

지원되는 사업비는 축산업 등록면적 범위 내에서 보조사업의 경우 농가당 최대 한육우 2억 원, 낙농 3억 원, 돼지 10억 원, 산란계·육용종계·종오리 10억 원, 흑염소·꿀벌·사슴 1억 원, 닭·오리 부화장 12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융자사업의 경우 한육우 4억 원, 낙농 5억 원, 돼지·산란계·종오리 50억 원, 닭·오리부화장·육계·육용종계·육용오리 30억 원, 흑염소·꿀벌·사슴은 7억 원까지 지원된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비는 축사 개보수, 축사 이전은 물론 축사 내부시설(급이·급수·전기·착유 등) 및 축산 관련시설(방역·퇴비장 및 기자재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폐사가축 처리시설 등 방역시설 설치와 생산성 향상 시설을 필요로 할 때 기존 지원액 외에 축종별로 2천만 원에서 2억 원까지 추가 신청할 수 있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축산업등록증, 사업 예정부지 등기부등본, 친환경축산물 인증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30일까지 해당 시·군 및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부산·경남

■ 9월 닭 사육수 6월보다 약 21% 감소

닭 사육은 줄고, 오리·돼지 사육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지방통계청은 경남·부산·울산지역 9월 가축동향조사를 한 결과, 지난 6월보다 사육하는 닭이 20.8% 줄었다고 밝혔다. 반면, 오리와 돼지는 각각 7%, 2.2%씩 증가했다.

지난 9월 1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경남 지역 닭

은 775만 2000마리로, 전분기보다 203만 마리가 늘었다. 주 소비철인 여름 성수기를 지나면서 가격 하락과 수요 감소로 육계 감소가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됐다. 산란계는 적정한 기온으로 산란율이 높아지는 시기로 감소폭이 적었다.

반면 오리와 돼지는 수요증가로 사육 마릿수가 늘었다. 오리는 75만 마리로, 전분기보다 4만 9000마리가 증가했다. 오리 고기는 건강 선호육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 고병원성 AI 유입 차단 현장 특별검사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유입을 막고 청정제주를 유지하기 위한 특별방역대책의 일환으로 제주도내 전 가금사육농가 및 철새도래지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는 오리와 닭, 철새 등 가금류에 대해 4480건의 검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효율적인 검사를 위해 사육규모별 검사시료를 채취, 면역형성 여부를 알 수 있는 항체검사와 바이러스 존재여부를 알 수 있는 항원검사를 실시한다.

특히 오리의 경우 임상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아 감염시 전파위험이 높음에 따라 집중적으로 검사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유입을 막기 위한 철새도래지에 대한 특별방역도 이뤄진다.

특별방역의 경우 겨울철새 남하시기인 10월부터 남방철새 유입시기인 5월까지를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동물위생시험소내 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하는 한편, 제주공항과 항만에 대한 차단방역도 실시하고 있다.

■ 서귀포시, 2013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 접수

서귀포시에서는 FTA협상 등 축산물 전면 수입개방에 대비 노후화된 축사시설을 개선하여 축산물의 생산성 향상을 기하고 청정축산물 생산기반 확대로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한우, 돼지, 닭, 흑염소, 꿀벌농가 등을 대상으로 2013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추진 희망농가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2013년에는 2,200백만원(기금 660, 지방비 440, 민자 1,100)을 투자하게 되며,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11월 28일까지 축산사업장 소재지 읍 · 면 · 동 또는 서귀포시청 축산과를 방문하여 신청하고 대상자선정 적격여부를 심사후 사업대상자로 확정,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대상은 한우사업단(브랜드 경영체)에 소속된 한우사육농가, 일정 사육규모이상의 전업농가(육우 · 젖소 50두, 돼지 1,000두, 닭 30,000수, 꿀벌 100군 등)이다.

사육규모(면적 환산)를 기준으로 보조+융자지원, 이차보전방식(융자) 대상자로 구분하며 지원내용은 축사개보수, 방역시설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이다.

지원조건은 보조포함방식은 기금보조 30%, 지방비 20%, 융자 50%(연리 3%, 3년거치 7년상환)이며, 이차보전방식은 융자 80%(연리 1%, 3년거치 7년상환), 자부담 20%이다.

앞으로 서귀포시에서는 노후화된 축산시설을 현대화함으로써 쾌적한 사육환경 제공, 화재와 자연재해 사전예방,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 제고는 물론, 청정제주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축산환경 조성으로 쾌적한 관광도시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